



인구 고령화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이아름 연구원

- 최근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¹⁾
 - 전 세계적인 고령화 가속화로, 향후 '초고령 국가(super-aged)²⁾'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생산가능인구(14~64세) 증가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³⁾, 향후 고령인구 증가는 세금과 같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일 것이라고 지적함.
-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측정하는 1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초고령 국가'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 불과하나 2030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핀란드와 그리스가 '초고령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5년까지 68개국이 '고령화 국가(aging)⁴⁾'에 진입할 것이며, 34개국이 '고령 국가(aged)⁵⁾'에 포함될 것임.
 - 2020년까지 8개국⁶⁾이, 2025년까지 12개국⁷⁾이 '초고령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203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의 '초고령 국가' 진입이 이루어져 총 34개국⁸⁾의 인구

1) Moody's(2014), "Population aging will dampen economic growth over the next two decades".
 2)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
 3)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현상(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
 4)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국가.
 5)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국가.
 6) 몰타,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7) 홍콩,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폴란드, 스위스, 영국, 에스토니아, 체코, 스페인, 헝가리.
 8)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싱가포르, 미국, 뉴질랜드, 보스니아, 조지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쿠바 등 9개국이 추가로 '초고령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구조가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신흥국⁹⁾ 가운데서 중국, 인도, 그리고 홍콩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9.5%로 추정되어 '고령화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16.2%로 늘어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6명으로 예상되나, 이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4.2명, 2050년에는 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경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2%로 예상되어 '고령화 국가'로 분류될 것임.
- 홍콩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3.8명에서 2030년 2.3명, 2050년 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가 세계 주요 55개국¹⁰⁾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¹¹⁾,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저축률 하락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1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하락은 투자여력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OECD도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으며, 2013년 3.6%의 세계 경제성장률이 2050년~2060년 연평균 2.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고령화율¹²⁾이 12.2%로 이미 '고령화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령 국가', 2030년에는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4.6명에서 2030년 2.7명, 2050년 1.5명으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부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9)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러시아, 태국, 터키는 현재 고령화 국가로 분류됨.

10) 프랑스, 영국, 독일 등 33개의 선진국과 몰타, 그리스, 헝가리 등 22개의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함.

11) 무디스(Moody's)가 2014년 8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분석 결과를 제시함.

12)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9.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9.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아직까지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대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냄.
- 무디스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는 노동참여율 제고와 이민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기적으로는 젊은 층 근로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퇴직 시기 연기 등을 통하여 노동참여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민 관련 절차와 규제 간소화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3년 '독일 하르츠 개혁(German Hartz reforms)¹³⁾' 추진으로 고령인구의 노동참여율을 높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장기체류권이 있거나 영속적인 체류계획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고령화 가속화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Moody's 등)

13) 신규 고용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간제 근로 및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55세 이상 실업자 채용 시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 면제, 52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 등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임.